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 김종희 의원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마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

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김종희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미래-평화-정의 "연동형 비례제 즉각 도입해야"

민주 · 한국당 대상

야 3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 집회'를 열고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 3당은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기득권 양당 욕심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고 한국당 역시 명쾌한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모호한 언급의 시간은 지났다. 명쾌하게 결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집권여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거부하는 지금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의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회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돌입한다"며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에서 바른미래당의 손혁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장병만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손혁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당 대표께서 예산안과 선거구제를 연결시키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한다"면서 "저희는 그저 선거구제를 개편하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 국회 기능과 권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갈 길이라며 "한국당은 지금 당장 다수제 득표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접으라"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더 이상 이 정부를 무조건 도와야 할 이유가 없

다"며 "이제 선거제도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라고 여당을 공격했다. 정 대표는 "예산 처리 관련 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도 관련 한국당과 짝꿍이 시도를 하면 두 거대정당은 불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대표가 발표한 세 가지 안 중 '우리 실정에 맞는'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한 국적 연동형이라는 것은 유신 독재력을 후예를 닮으려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도 정확한 선거구 획정을 맞춰야 한다"며 "12월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개혁하자고 해놓고 신뢰를 깨어놓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은 집회 후 로텐더홀로 이동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뉴스1

국회 교육위, 6일 '유치원 3법' 재논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6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 일원화 등을 놓고 대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일원화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운영 자율성과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원화를 대안(김한표 의원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국가지원금과 일반회계는 통합하고 지원금만은 그대로 유지하되 목적 외 사용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두고 협상을 제안했고 한국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6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게 됐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뉴스1에 "교육위 법안소위를 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존 논의에 더해 우리당의 중재안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한국당, 오늘부터 '당원권 · 전당대회 룰' 논의

개정위원 선임안 의결

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에 관한 규정과 전당대회 관련 룰 개정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5일부터 시작한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당규 개정위원 선임안을 의결하고 김용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당헌·당규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성원 조직부총장과 김석기 사무부총장이 맡고, 김성원·김종석·유민

봉 의원과 정기영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 지도부 선출절차, 지도부 체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5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기소된 폐도 당원권을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1

근로자 가족 돌봄 지원 강화

김관영 의원, 법안 발의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시, 이를 허용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의해 출산휴가 이전에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이 가능한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휴직(임신기휴직)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법에는 출산휴가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에는 최장 45일까지 출산 휴가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임신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임신기 휴직을 신설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도 임신기휴직 급여 지급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 일반 근로자는 출산 전 휴가만 가능할 뿐, 임신기휴직이 불가능하여 태아건강과 직장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일반 근로자도 당당히 임신기 휴직을 사용하여 임산부의 모성보호와 가족 돌봄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